

## 자본주의금융정책목표의 부당성

리 경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돈을 만능으로 여기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은행은 금융적지배자로 등장합니다.》

(《김정일전집》 제7권 305페이지)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은 은행권의 발행권한을 독점하고 대독점은행을 포함한 민간은행들을 지배하는 《은행의 은행》으로 되어 자본주의경제생활 특히 화폐유통을 규제하고 조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금융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독점자본주의적지배를 실현하는데 복무한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금융정책목표라는것을 내세우고있는데 그것은 대독점들에게 고물리운을 보장해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목표는 최종목표와 중간목표로 나누어볼수 있다. 최종목표는 총적인 경제정책목표와 일치하며 중간목표는 금융정책의 효과성정도를 가늠하고 정책운영을 안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간목표를 매우 중시하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에 여러가지 비정상적사태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금융정책의 시행정도를 가늠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판단할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것과 관련된다.

력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이 내세운 금융정책의 목표들은 금본위제시기와 금본위제파탄이후시기, 현시기로 나누어볼 때 그 내용상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무엇보다먼저 금본위제시기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금준비방위를 금융정책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원래 금본위제에서는 그자체가 자동적인 통화조절기능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인위적인 통화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 금본위제에서는 금과 은행권의 자유태환이 이루어지고 금의 자유이동, 자유주조가 확고히 보장된것으로 하여 필요유통량과 유통중화폐량이 일치하게 되므로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조절을 위한 금융정책이 필요로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과 신용거래의 확대는 금본위제에서도 인위적으로 통화조절을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상품유통이 확대되는데 따라 은행권과 같은 신용화폐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자유태환의 기초조건인 발권은행의 금준비를 방위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는것과 관련된다. 금본위제에서 유통령역에는 본위화와 함께 화폐대리물들이 함께 유통된다. 여기서 본위화는 다른 모든 통화형태들의 기초를 이루고 그 유통의 물질적담보로 되지만 전체 유통액에서 지배적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은행권과 같은 신용화폐였다.

금본위제에서 금준비방위가 금융정책의 목표로 된것은 발권이 금준비에 의해서만 진

행된것이 아니였기때문이다.

금본위제에서 발권은 2중적보장성 즉 금준비발권과 신용적담보발권으로 이루어지는것으로 하여 신용거래의 확대로 은행권의 발행과 류통규모가 커지면 태환용금준비가 부족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금태환요구에 응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자유태환을 기동으로 하는 금본위제에서 화폐류통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위험성은 끊임없는 자본주의경기변동과 부르조아국가의 침략책동, 반인민적시책으로 빈번히 현실화되어 자본주의적생산과 화폐류통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실례로 도이칠란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 류통화폐량이 26억DM이었던것이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통화를 람발시킨 결과 1917년에는 류통중통화량이 148억DM, 1918년에는 225억DM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결과 금준비률이 1914년에 34%였던것이 1918년에는 7%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금본위제시기 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준비방위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공정리자률정책과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금융정책의 구체적수단들을 리용하였다. 그러나 금본위제의 파탄과 함께 중앙은행들이 내세운 금융정책의 금준비방위목표도 파탄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금본위제파탄이후시기 즉 1930년대부터 1970년대초 기간에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을 금융정책의 주요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획책하였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금융정책목표를 내세운것은 당시의 실패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1929-1933년 대공황으로 하여 력사에 없었던 대규모실업과 《파잉》자본이 발생하고 여기에 케인즈의 조절적자본주의치방이 나오면서 《완전고용》과 경제위기의 《회피》 및 《극복》이 금융정책의 목표로 새롭게 설정되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1929-1933년 대공황의 후유증도 채 가시지 못한채 1937년에 새로운 공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자본주의나라들은 전후위기와 전시인플레를 해소하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이룩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후파로 인플레가 만연되고 물가가 매우 불안정하게 오르내리였으며 실업률이 매우 높았다. 이로부터 195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까지 《경제성장》을 금융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경제에서 《고도성장》을 맞이하려고 하였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금융정책목표들을 내세웠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다.

다음으로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1970년대 중엽부터 《물가안정》과 《느슨한 성장》을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통화공급량을 중간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최근시기에 와서 침체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것을 금융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1970년대 중엽에 와서 금융정책의 목표가 변경되게 된것은 우선 이 시기에 와서 제2차 세계대전후 거의 20년동안 지속된 《고도성장》이 막을 내리고 경제적침체가 도래하였기때문이다.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은 대폭 저하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세계전반에 위기상태가 만연되었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와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인위적으로 규제된 저금리에 의한 자금공급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정책적목표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인플레이억제》와 《안전성장》을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이전시기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여러가지 금융정책을 집행하였지만 경제의 《고도성장》이 파란되자 《적절한 경제성장》이라도 이룩해보려고 금융정책의 목표를 변경시키게 되었다. 즉 《고도성장》으로부터 《느슨한 성장》, 《물가안정》으로 목표를 변경시키게 되었다.

1970년대 중엽에 와서 금융정책의 목표가 변경되게 된것은 또한 국제적인 과잉류동성 자금이 증대되고 그에 따르는 해외단기자본의 흐름이 강화된것과도 관련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적경기자극정책에 의하여 세계에 대한 금융적지배의 일환으로 전세계에 살포된 과잉달러가 늘어나고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 및 자본축적과 함께 유럽달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투기적인 단기류동성자금의 기본원천으로 되었다. 유럽달러는 이시기에 와서 1957년에 비해 153.3배라는 놀라운 팽창을 가져왔으며 결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운동으로 하여 일어날수 있는 금융적혼란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으며 통화공급량을 중간목표로 중시하게 되었다.

최근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을 금융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침체기에 빠진 저들의 경제를 회복하고 《적절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력리자정책, 인플레이정책을 강구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이 금융정책목표들을 내세우고있지만 자본주의제도에서는 전혀 실현될수 없는 부당한것이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목표의 부당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화폐수량설과 신통화주의와 같은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리론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화폐수량설은 화폐량에 의하여 화폐의 가치 및 상품가격이 변동, 결정된다는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리론이다.

신통화주의는 통화량에 의하여 물가가 변동되고 경제가 좌우되되며 통화공급량을 조절하여 제국주의의 경제적모순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리론이다.

그러나 부르쥬아어용학자들은 화폐수량설과 그의 변종인 신통화주의에 기초하여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 내세우고 그를 잘 조절해나가기만 한다면 《물가안정》, 《적절한 경제성장》, 《완전고용》을 달성할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다.

자연발생주의와 개인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를 《조절》하여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이룩하겠다는 금융정책의 목표야말로 실현될수 없는 부당한 목표이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목표의 부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제국주의의 본성과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취약성으로 하여 실현될수 없다는데 있다.

산업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은 침략과 반인민적시책들을 자기의 주되는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결과 통화를 람발하고 금의 해외류출을 막으며 전쟁에 필요한 금준비를 위해 은행권과 금의 자유태환, 금의 자유이동, 자유주조를 중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준비를 방위하겠다는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부당한것이다. 신용거래가 확

대되어 화폐의 대리물인 신용화폐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조절》을 통하여 금준비를 방위하겠다는 금융정책은 경제공황이 주기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제도에서 신용거래가 파탄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준비와 신용화폐의 련결이 파탄을 면치 못하는 자본주의경제의 취약성을 무시한 허황한 목표이다. 신용적담보로 발행된 은행권은 자본주의경기변동으로 신용거래가 파탄되면서 중앙은행의 금준비와의 련결이 파탄되게 되며 결과 늘어난 은행권과의 태환용금이 부족되고 금태환요구가 정지당하게 되어 금준비방위를 목표로 내세운 금융정책은 파탄되게 되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목표의 부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으로부터 전혀 실현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시장경제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경제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절된다. 물론 현대제국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인것으로 하여 부르조아국가가 경제생활에 많이 간섭해나서고있지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경제는 자연발생적인 경제인것이다.

자본주의사회 특히 현대제국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대독점들의 리윤치부에 나라의 모든것이 복종되는것으로 하여 그 무슨 《목표》를 내세우고 국가가 금융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는것은 실현불가능한것이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단순한 경제적목표를 내세우고 통화공급량을 조절하여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완전고용》을 이룩하려는 극히 실무적인 정책이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이 자본주의경제에 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금융정책목표를 내세우지 않는 한 그것은 자본주의경제를 더욱더 악화일로 몰아가고 위기를 산생시키며 로자간의 모순과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정책들을 집행해나가고있지만 그것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사이의 련계를 파괴하고 경제생활전반을 모순의 악순환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목표라는것은 실현불가능한 부당한것이며 자본주의경제의 기생성과 부패성, 취약성을 가리우기 위한 한갓 도구에 불과한것이다.